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 협약

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명이다.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동물보호단체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동물권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실현한다.

- 전국적 실태조사와 동물학대, 환경, 방역상의 문제 파악 및 해결 방안 도출
- 2022년까지 유기동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기
- 길고양이 중성화(TNR) 정책의 전면 실시
- 직영 동물보호소의 확대
- 지속가능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대책의 확립

2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을 추진한다.

-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금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도입
-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의 전면 도입
- 동물복지 도축장과 인도적인 운송차량 전면 확대

3

동물복지 확보 및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방역정책을 수립한다.

-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정책 도출과 관련제도 및 방안 마련

4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한 규제 및 실험자 의무를 강화한다.

- 동물실험 규제의 선진화
-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이 대체 기술 전략 및 인프라 구축

5

야생동물 보호 정책을 강화한다.

- 비인도적인 모피제품 수입판매 제한
-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

6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 고래류 포획 및 사육 금지
- 전시동물 시설의 관리기준 강화

7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를 적극 검토한다.

- 동물복지 실태조사 제도 확립
- 지자체에 동물보호 전담인력·전담부서의 설치
-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주무부처 이관 등 합리적인 정부조직개편 검토
- 헌법에 ‘동물권’ 명시 검토 및 동물보호 교육 정규과정 편성 추진

2017. 3. 22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동물보호단체연대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박소연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간사 박운선, 황동열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 박창길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이원복